

고급차 앞에 소비자주권 ‘바닥’... 리콜론 안돼, ‘레몬법’을

(동일한 결함 3회 시 차량환불·교환)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 말로만 ‘소비자가 왕’

국내, 수입차 판매 매년 늘지만 서비스나 보상 등 배려심 부족 소비자들 집단행동 등 움직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차업체의 서비스나 보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배려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BMW 리콜대상 차량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차주 1226명을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오는 2019년 1월 시행될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폴크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사태를 겪은 지 약 3년 만에 배기가스 배출 조작 의혹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회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신차구매 후 차량에서 똑같은 증상의 결함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와 차주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 발견될 시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주는 법)을 발의했지만 불만이 극에 달한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기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찾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BMW 차주 4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소송 참여자들은 총 2000명을 넘어섰다. 배상 요구 금액은 총 183억9000만원에 달한다.

3일 하중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리콜대상이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들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소송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9년 1월 시행될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하변호사는 “차량이 3번이나 고장이날 때까지 국내 소비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량의 결함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BMW 리콜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레몬은 결과 속이 달라 실망

감을 준다는 이유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발생할 경우 판매 금지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부품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조종 장치, 연료공급장치, 전자장치, 차대 등이 포함되지만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부품 중요도에 따라 차량 교환 및 환불여부가 결정되는데 정작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는 데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BMW 사태 피해자들은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BMW 피해자모임과 논의의 안건과 실험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고 협의를 완료한 뒤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실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MW 차량 화재사건과 관련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차량 결함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기 보다 해당 차량의 고객에 대한 ‘조용한 보상’을 진행하며 여론 확산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일명 ‘벤츠 골프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5년 9월 광주에서 시동꺼짐 현상으로 고통을 겪던 벤츠 차주가 회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이에 분노해 자신의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주에게 보상을 해주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디젤 스캔들’을 일으켰던 폴크스바겐은 디젤 게이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전문학적인 보상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생색내기엔 그쳤다. 당시 미국에서 최대 1100만달러를 보상한 반면 국내선 100만원짜리 쿠폰을 제공했다.

김필수 교수는 “미국의 경우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회사가 수천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방탄소년단)

‘손흥민 되고, BTS 안 되고’ 병역특례법 개선 요구 빗발

아시안게임 대표팀 병역문제 논란 대중예술인 등도 포함 주장 거세 기한수 병무청장 “재검토 계획”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혜택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3일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중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졌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

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전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한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 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

>> 1면 ‘골목상권 새 포식자...’서 계속

2016~2017년, 464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56개 매장으로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준대형마트는 출점제한을 받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의무 휴무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허다하다”며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고객 수에 비례하고, 고객 수는 점포 수에 비례하다보니 SSM의 성장은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

했다. 이어 “준대형마트의 한계를 모르는 성장과 가격경쟁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새로운 ‘시장경제 포식자’에 주목해야 함은 물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8월 서울 집값 고공행진... 용산·마포 주도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전국 매매가격 0.02% 상승 전환 서울 0.32%→0.63% 상승폭 확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은 상승 전환했고,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 폭은 더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0.02%에서 0.02%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서울은 0.32%에서 0.63%로 배 가까이 상승 폭이 커졌다. 2016년 2월

(변동률 0.00%)을 제외하면 48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도 0.11%에서 0.24%로 배 이상 올랐다.

한국감정원 측은 “서울은 불확실성 해소 및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매수문 의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경기 지역은 교통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올라,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강북 14구에선 다양한 개발호재·직주근접·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됐다. 용산구(1.27%), 마포구(1.17%), 중구(0.91%), 은평구(0.81%)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남 11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0.66%)와 송파구(0.61%) 등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개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영등포(1.14%), 동작구(0.91%), 양천구(0.77%) 등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반면 지방에선 집값이 떨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방의 주택매매가격은 -0.17%로 전월(-0.13%)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산 등 5대 광역시가 -0.07%(전월 -0.06%), 8개도가 -0.24%(전월 -0.19%)로 각각 전월 보다 매매가격이 더 내렸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벤처·中企 위한 성장지원펀드, 3조로 확대

금융위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점검 혁신기업 투자 운용사 18곳 선정

정부가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를 3조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중구 금융위원장, 정재욱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자금회수 및 재도전'의 단계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민·관 매칭 방식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 및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이 개최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유의동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으로 1차 펀드 2조원, 2차 펀드 3500억원 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선 각 펀드를 혁신기업에 투자할 18개 운용사가 선정됐다. 이들 운용사가 모은 자금이 애초 계획했던 2조3500억원보다 많은 3조700억원이다.

운용사에는 IMM인베스트먼트와큐캐피탈파트너스, 우리PE, 아주IB투자, N

H투자증권, 스톤브릿지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이상파트너스 등이 포함됐다.

결성을 마친 펀드부터 차례로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이날 투자 전략을 발표한 1호 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는 목표한 3550억원 결성을 최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